

## 정부의 창업자금지원이 창업가의 사업확장의도에 미치는 영향: 소규모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박일주\*\*

최종민\*\*\*

---

최근 정부 기조에 따라 창업자금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자금지원을 통한 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도와주고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정부 지원 자금을 편취하거나 정부 지원만으로 사업체를 유지하려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자금지원이 창업가의 사업을 확장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로 현상유지(status quo) 행태를 보이는 데 일조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창업 5년 내 767개 기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일정 수준까지의 정부 창업자금지원은 창업가의 사업확장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 그 이상의 창업자금지원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자금 지원 관련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주제어: 창업, 창업 지원, 정부 지원

---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3A2067636)

\*\* 제1저자,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한국인의 효능감, 창업, 혁신 등이다 (ijpark@yonsei.ac.kr).

\*\*\* 교신저자,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과학기술혁신, 중소기업지원, 규제연구 등이다(jmchoi@kosbi.re.kr).

## I. 서론

흔히 창업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사업을 시작하기보다 정부나 민간 벤처 캐피털로부터 창업자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이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에 기여한다(안수진, 2006; 이운숙·이상준·신호정, 2018; Kane, 2010). 다른 OECD 국가들은 2000년대 이후 창업률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창업률은 다소 상승하는 추세이며 이는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sup>1)</sup> 벤처기업의 수 역시 2006년 1만 2,000여 개에서 2018년 3만 7,000여 개로 약 10년 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sup>2)</sup> 창업기업의 대부분이 소규모 기업인데 이들은 그 규모 자체는 비록 작지만 전체 사업장 수의 약 72%를 차지하며 고용 인구 중 15%가 이 사업장에 종사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창업률이 높은 만큼 소멸률도 높고 생존율도 낮은 편이다. 즉,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이 크지 못하다는 것이다. 5~6년 사이 소위 말하는 죽음의 계곡(the valley of death)을 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가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창업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죽음의 계곡을 넘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 중 하나이다.

정부 역시 창업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아왔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가의 우선순위 정책들이 선정되었는데 이 중 39대 과제는 바로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이다.<sup>3)</sup> 정부는 혁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장려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창업 자금지원도 그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 자금문제를 쉽게 겪는데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애로 극복에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문재인 정부에서만 실시하고

1) 2015년 기준 한국의 창업률이 14.6%여서 프랑스 9.4%, 독일 7.1%, 스페인 9.2%, 이탈리아 7.3%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국가지표체계, ‘창업률’ 해설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004>. 접속일: 2019년 3월 13일.

2) 국가지표체계, ‘창업률’ 해설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004>. 접속일: 2019년 3월 13일.

3)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00대 국정과제. [http://www.evaluation.go.kr/psec/np/np\\_2\\_1\\_2.jsp](http://www.evaluation.go.kr/psec/np/np_2_1_2.jsp). 접속일: 2019년 3월 13일.

있는 국가전략이 아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으며,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전략 중 하나이다(Wessner, 2006; Butler, Galassi & Ruffo, 2016; Figlioli, Rush & Sapsed, 2017).

창업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는 만큼 정부 정책의 실증효과에 관한 논의를 통해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금지원에 대한 효과성을 연구한 논문들은 대부분 R&D 자금지원과 혁신성과와의 관계를 보았으며, 창업자금 지원이 중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자의 사업확장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중소기업들의 성장 의지가 어느 순간 줄어들어 더 이상 성장을 추구하지 않고 규모를 축소하거나 일정 수준 유지와 연명에만 급급한 일명 ‘피터팬 증후군’<sup>4)</sup> 현상이 실제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금지원 자체와 기업의 성장의지에 대한 부분을 조명한 연구 역시 드물다. 정부의 창업자금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평가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지원이 창업가의 사업 확장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로부터의 창업자금이 사업을 확장하려는 행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로 현상유지(status quo)를 하려는 행태에 일조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우리나라 창업 5년 이내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소규모 기업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자금지원과 혁신성과와의 관계만을 조명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부 정책자금의 일종인 창업자금지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세우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 1. 기업가의 성장 의지에 대한 논의

기존 연구들은 기업생멸주기를 기업의 창업과 성장, 성숙 그리고 중단, 즉 폐업으로

---

4)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에서는 ‘피터팬 신드롬’을 ‘경제학에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중소기업으로서 받았던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중견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음을 전제한다(Reynolds & Curtin, 2009). 그러나 모든 기업들이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약 10년 전 Reynolds (2007)는 미국 PSED(Panel Study of Entrepreneurial Dynamics)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의 설립 후 7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아보니 약 3분의 1이 폐업했고, 3분의 1이 사업을 진행 중이며 그 외 3분의 1이 여전히 준비 중임을 밝혀냈다. 즉, 모든 기업이 초기 기업을 거쳐 성장기 및 성숙기를 거치는 동일한 기업성장주기(business life cycle)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사업의 확장이나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 폐업하는 사례도 결코 적지 않다(Etemad, 2013).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2018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기업이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지 못하고 현상유지에 급급하거나 폐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주로 기업의 역량 및 성과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역량과 성과가 부족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까운 일이다. 그래서 기업 자체적으로나 정부 차원에서나 기업의 역량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심지어 역량과 성과가 동일하더라도 어떤 기업은 성장을 거듭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어떤 기업은 현상유지만 하려 하거나 폐업하기도 한다. 먼저 이러한 현상은 기업 내부적 요인이 아닌 거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는 기업의 입지요건, 즉 지리적 거시 요인들의 영향력을 중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리적 요인으로 주력산업과 관련된 인프라 및 노동인력풀, 지원 산업의 존재여부, 잘 구축된 사회간접자본, 도시 내 다양한 회사로부터 오는 다양한 지식의 존재 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Marshall, 1890; Arrow, 1962, Romer, 1986; Jacob, 1969). 즉, 기업이 동일한 역량과 성과를 가지더라도 어느 곳에 입지를 하는지에 따라서 향후 성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은 같은 거시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 간에도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동시대 같은 산업군에 존재하고 동일한 지리적 위치에 존재하며 같은 시기에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해도 동일한 기업생명주기를 경험하지 않는다. 거시적 조건 못지않게 기업 자체의 역량과 경영의사결정 등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기업 경영자의 성장 의지 역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Miller (1983)에 따르면, 창업과정(entrepreneurship)의 주요 결정요인들에 대해 논한 일부 연구들은 기업의 구조에 의해 좌우되는 역할이나 전략적 결정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나 다른 연구들은 지도자의 개인적 특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Wiklund & Shepherd (2003)는 Aizen의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빌려 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기업가의 성장 의지(growth aspiration)를 꼽았으며 박찬수·김승현·장우영 (2015) 역시 기업 성장을 위한 내부 요인 중 기업가의 성장 의지(growth aspiration)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기업의 성장은 거시적인 요인 외에도 기업 내부인 기업가의 성장 의지에서 찾아 볼 수 있기에 기업가의 성장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기업생멸주기 상 창업단계를 지나 성장단계로 발전하려는 기업이 주를 이루는 소규모 기업들에서 기업가의 성장 의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학술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업가의 성장 의지를 제고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논의들을 우선 검토하고 가설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업가의 성장 의지는 여러 요인에 의해 제고될 수 있다. 우선 경영자의 지식과 경험은 창업 관련 기회를 발굴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Gaglio & Katz, 2001). 예를 들어 Arentz et al. (2013)는 Kirzner의 이론을 빌려 사전 지식이 창업 관련 기회를 발견하도록 돕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개인이 창업 관련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은 사전 지식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전 지식은 개인으로 하여금 주의를 기울여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Wiklund & Shepherd (2003)는 기업가의 성장 의지가 실제 기업 성장과 연관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면서 성장 의지가 크면 기업이 성장함은 물론이고, 해당 기업이 처한 환경을 비롯하여 관리자의 교육 수준과 경험에 따라 기업가의 성장 의지가 다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 창업을 지속해온 기간과 이전 관련 경력, 창업준비기간 등은 경영자의 지식과 경험을 가능케 하는 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Autio and Acs (2007)는 가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가가 기업을 성장시킬 열망이 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들 역시 기업가의 성장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러한 영향이 유의미함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이 존재하며 현실에서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우선 기업가가 속한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기업가의 성장 의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Estrin, Korosteleva, and Mickiewicz (2013)은 2001년부터 2006년 42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을 성장시키려는 기업가들이 해당 국가의 제도(institutions)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하였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지만 만약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성향이 약하거나 부패수준이 높다면 기업가가 성장을 꾀할 의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 기업가의 성장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Liao and Welsch (2003)는 기업의 산업군에

따라 그 영향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기술 기반 기업이 불필요하지 않은(non-redundant) 정보들을 보다 자유롭게 많이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적 배태성(relational embeddedness)에 따라 성장 의지를 달리한다고 본 반면 비기술 기반 기업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광범위성을 의미하는 구조적 배태성(structural embeddedness)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이는 우리나라 사정과는 무관하지 않다. 이경진·박남준(2018)은 제조업 혹은 지식서비스업에 속하는 3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일부 중견기업들이 피터팬 증후군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주요 환경 요인으로 하도급 환경의 변화, 조세 증가, 연구개발 지원 환경의 변화, 노동환경의 변화 등을 꼽아 제도 및 환경 등이 기업의 성장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들도 있다. Autio and Acs (2007)는 기업가들의 성장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국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 기업가가 속한 국가의 조세 제도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에 따라 개인 요인들이 성장 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기업을 규모에 따라 세분화해서 보면 대기업의 성장 의지와 중소기업의 성장 의지가 다를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대기업은 이미 성장을 거듭하였기에 추가 성장 의지가 약할 가능성이 있고,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낮고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해 성장 의지가 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Dilling-Hansen (2017)은 특별히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대기업 대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분명한 근거가 제시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성장 감퇴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은 성장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들은 대부분 그 원인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정리한다(Dilling-Hansen, 2017). 즉 규모에 상관없이 기업가의 성장 의지와 의사결정이 기업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기업가의 성장 의지(growth aspiration)와 관련된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존재하는 한편 기업가들이 성장을 주저하고 현상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포착한 논의 또한 존재한다. 기업가들 역시 기본적으로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에 안주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Burmeister & Schade, 2007; Sandri, Schade, Musshoff, & Odening, 2010). 기업가가 다른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지적한 선행연구들은 기업가들 역시 사업 중단이 보다 합리적 의사결정임에도 심리적

관성(psychological inertia)에 의해 이를 바로 실행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Sandri, Schade, Musshoff, & Odening, 2010) 비기업가들 대비 현상유지 편향이 적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Burmeister & Schade, 2007) 보았다. 그리고 Gray (2002)는 기업의 변화가 개인의 창업 관련 인식과 실행에 기반을 두다 보니 불연속적(discontinuous)이고 고르지 못한(uneven) 특성이 있다고 본 스펀터의 논의를 정리 하면서 실제로 많은 비혁신적인 기업들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결국 폐업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종합하면 기업의 성장 의지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기업가 개인의 특성들을 꼽을 수 있지만 시장상황, 제도 등 환경적 특성 또한 꼽을 수 있으며, 성장 의지를 촉진하는 요인 외에도 이를 억제하거나 현상유지 편향을 갖게 하는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 또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효과적인 정부 역할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성장 잠재력이 큰 창업 초기의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자금과 기업의 성장 의지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다.

## 2. 정책자금 지원과 기업가의 성장 의지

Kirzner (1979, 1997)는 창업가들이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고 시장에 진출한다고 보아 창업가 행동과 관련된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 지원 역시 창업가의 자원 중 일부라고 보면 정부 지원이 창업가들의 기회 발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창업가의 사업확장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실정을 분석하여 정부의 자금 지원이 창업가의 기회 발굴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김창봉·이승연 (2017)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과 기업의 경영성과 간 관계를 논한 논의들 대비 정부 지원과 기업가의 성장 의지 간 관계를 직접 논한 논의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창업 당시 정부 지원이 기업가의 창업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대비 정부 지원이 기업가의 사업확장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 역시 다소 미진하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정부 지원이 야기하는 효과에 대해 간단히 논하고 정부지원이 기업가의 성장 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시장 내 대기업 대비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문제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연구들(Stiglitz and Weiss, 1981; Lerner, 1999)이 있었다(김준기 외, 2008). 그런데 정책자금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에 국한해 논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필요한 자금을 일정 부분 보조하여 연구개발활동 활성화를 불러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기업이 혁신을 기반으로 하여 성장하게 하는 것을 기대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자금을 수혜한 중소기업이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연구(이영범, 2006)와 2회 이상의 지속적인 정부지원이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연구(장현주, 2016)가 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의 자금 지원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축소한다는 논의들이 제기되었다. 이는 일명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이다. Gonzalez & Pazó (2008), Duguet (2004) 등은 정부자금지원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구축효과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본 반면 Busom (2000)은 정부자금지원이 일부 기업에 있어서는 구축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여러 국내 실증분석들 역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정작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를 유인하기 보다는 이를 대체해버리는 일종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야기한다고 파악하기도 하였다(김학수, 2007; 송종국·김혁준, 2009; 최대승, 2014).

이처럼 정부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자금의 역할이 항상 긍정적이지 않고 상황과 조건 속에서 부정적 효과를 일으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역시 반드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정부의 자금지원이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기업가의 행동, 사업확장의도에도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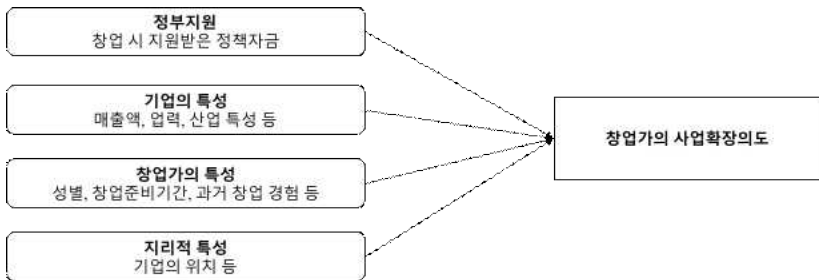
다시 말해 정책적 기대와 달리 정부의 자금 지원에 따라 기업가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기업의 성장 의지가 고취될 수 있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인간의 행동용이성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학문적 논의가 존재한다. Ajzen (1985, 1991)은 행동용이성(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이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얼마나 쉽게 혹은 어렵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로, '개인이 가진 자원과 장애물, 그리고 과거의 경험 등에 비추어 결정된다'고 보았다. Ajzen의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이란 기존에 인간 행동 결정 요인에 대해 설명한 합리적 행동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에서 행동 용이성(perceived behavior control)을 추가로 고려한 이론이다. 합리적 행동 이론은 행위에 대한 개인의 태도(attitude)와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에 따라서 행동(behavior)이 결정된다고 보았던 데 비해 Ajzen의 이론은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행동 용이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



다. 그런데 행동 용이성이 클 때 개인이 비윤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실증분석을 제시한 논의들이 존재한다. 안선민·이수영 (2017)은 비윤리적 행동의 적발 가능성이 낮고 법적 제재가 어려울 때에 개인이 전략적 혹은 기회주의적으로 비윤리적 행동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리한 바 있다.

본 논문은 정부지원을 수혜하면서도 기업가가 성장을 피하지 않는 것은 정부지원 증가로 인해 기업가의 행동 용이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발전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이루어지는 격이라고도 볼 수 있음에 주목한다. 실제로 정부의 자금지원에만 의존하여 기업의 수명을 연장하는 일명 ‘정부의존형 기업’들을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지원에 의해서만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논의한 연구들은 이들을 일명 ‘정부재정의존형 기업(박은희, 2015)’, ‘좀비기업(김태형, 2016)’, ‘한계기업’ 등으로 부른다. 이들에 대한 세부 정의는 다르더라도 통상적으로 외부의 자금지원이 없이는 회생 불가능한 기업을 의미한다. 2018년 3월 기사<sup>5)</sup>에 따르면 이자도 벌지 못하면서 10년 가까이 버티는 장수 좀비기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림 1〉 연구 모형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원인은 여러 가지일 것이나 정부의 규모의존정책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부의 지원 및 규제 내용과 규모가 다르고 소기업에 유리해 기업의 규모를 키울 유인동기를 억제한다는 논의도 존재한다(이병기, 2015). 실제로 이병기 (2015)가 기업 규모 간 이동 비율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2000년에 존재했던 제조업 및 서비스업 기업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2000년 종업원 수가 50명 미만이

5) 매일경제, 2018.3.29., 이자도 못 벌고 10년 버티는 ‘장수 좀비기업’ 수두룩. <http://news.mk.co.kr/newsRead.php?no=201010&year=2018>. 접속일: 2019년 3월 13일.

었던 제조업 기업이 2012년에 종업원 수가 50~299명인 기업이 된 비율이 전체 기업 중 0.4%에 불과하였다. 같은 경우 서비스업 기업은 0.1%에 불과하였다.<sup>6)</sup>

이상의 논의들을 살펴본 결과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연구개발 기술혁신 성과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정부 지원이 기업의 사업확장 가능성을 제고하는 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정부 지원, 특히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및 성과의 창출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왔으나 정작 기업 자체가 지속되고 성장하는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 지원이 증가하면 기업이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심지어 확장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지만 정작 그렇지 못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일명 '피터팬 증후군'을 겪는 기업들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실제 경영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정작 이에 대해 논의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소규모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기업의 특성, 창업가의 특성, 지리적 위치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실제로 정책자금지원이 기업가의 사업확장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우리나라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정책 현황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융자 목적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액은 2018년 기준 총 3조 7,350억 원<sup>7)</sup>이며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 목적에 따라 6개 세부 자금<sup>8)</sup>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별첨 1〉 참조). 이에 비해 2019년 예산은 약간 감소하여 3조 6,700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창업기업지원을 위한 자금은 2018년 기존의 창업기업지원과 청년전용창업 등 2가지 부문으로 총 1조 8,660억 원이 지급되었던 것이 2019년에는 혁신창업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개발기술사업화지원 등 3가지 부문으로 총 2조 800억 원 지원될 예정<sup>9)</sup>이라 창업기업지원에

6) 한국경제, 2015.3.5., [사설]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 치유할 방법 정말 없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5030591641>. 접속일: 2019년 3월 13일.

7) 중소기업진흥공단, <http://www.sbc.or.kr/sbc/SH/SBI/SHSBI001M0.do>. 접속일: 2019년 3월 13일.

8) 창업기업지원자금, 투융자금융복합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9)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18.12.27., '중기부,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18).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각 사업이 지정한 용자방식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저리에 대출할 수 있는데 시설자금 혹은 운전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지원대상 선정에 위한 평가기준은 크게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정책목적성 등 4가지로 나뉘고, 이는 다시 기업이 속한 산업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sup>10)</sup> 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이나 금융회사 대리대출로 진행되는데 전국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sup>11)</sup>

〈표 1〉 중소기업 정책금융 통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정책자금	자금(억원)	48,929	44,481	39,019	45,512	46,661
	지원업체수(개)	40,244	55,805	17,796	21,224	22,836
	업체당자금	1.2158	0.7971	2.1926	2.1444	2.0433
보증	계(조원)	74.2	74.7	77.0	80.5	84.5
	신보(조원)	41.0	41.0	41.0	42.0	44.0
	기보(조원)	18.9	19.2	19.8	20.5	21.3
	재단(조원)	14.3	14.5	16.2	18.0	19.2

(출처: e-나라지표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분리되어서 일시적으로 규모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나 업체 당 지원자금이 2013년 1.2억원에서 2017년 약 2억원으로 약 1.7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도 2013년 74.2조에서 2017년 84.5조로 보증지원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10) 중소기업진흥공단, <http://www.sbc.or.kr/sbc/SH/SBI/SHSBI013M0.do>, 접속일: 2019년 3월 13일.

11) K-Startup, 창업기업지원자금 안내 페이지, [https://www.k-startup.go.kr/homepage/businessManage/businessManageFunction.do?mid=1565&sid=121&itemSeq=1098&bizCategoryCode=BIZ\\_CC\\_2](https://www.k-startup.go.kr/homepage/businessManage/businessManageFunction.do?mid=1565&sid=121&itemSeq=1098&bizCategoryCode=BIZ_CC_2), 접속일: 2019년 3월 13일.

〈표 2〉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지원 주요 사업  
(예산액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사업명	사업 목적	지원 범위	지원 방법	예산		
					2017	2018	2019
장애인기업 육성	장애인 창업육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심점을 마련하고, 장애인을 경제활동의 주체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자금 지원(보조) 교육 지원	1,029	2,229	2,229
민관협력 창업자 육성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유망 창업자를 발굴하여 민간 운영사의 액셀러레이팅 및 대중간-벤처기업 등의 기술력과 인프라 등을 제공하여 성공창업 유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자금 지원(보조) 경영 지원	25,000	53,600	38,900
	사내벤처 육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자금 지원(보조)	10,000	10,000	10,000
창업저변확대	멘토링플랫폼 운영지원		예비창업자	교육 지원 경영 지원	5,448	4,919	4,432
	실전창업교육	참신하고 유망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에게 기업가 정신 교육부터 멘토링, 시제품 제작,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여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	예비창업자	교육 지원 경영 지원 기술 지원	9,840	9,000	5,700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부우처		창업초기기업	경영 지원	-	10,000	16,000
	도전(스타트업) 벤처창업대전		예비창업자	교육 지원	2,400	3,300	2,800
			창업초기기업	교육 지원	2,830	1,600	3,000
창업사업화 지원	예비창업패키지	- 예비(창업이전), 초기(3년 이내), 도약(3-7년차) 등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성공률 및 생존률 제고	예비창업자	교육 지원	-	101,300	101,050
	초기창업패키지		초기창업자	교육 지원	104,390	118,600	102,680
	창업도약패키지	-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유치 등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자금 및 멘토링 지원	도약단계(3-7년차) 창업기업	교육 지원	60,000	80,000	84,000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해외 진출 창업기업	교육 지원 경영 지원	5,300	7,200	7,225
투융자복합 금융(융자)	투융자복합금융(융자)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 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중소기업	자금 지원(융자)	150,000	170,000	200,000
창업기업자금(융자)	혁신창업지원자금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신속·우선·집중 지원,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촉진을 통한 고용창출 도모	창업초기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자금 지원(융자)	1,910,000	1,896,000	1,450,000
	청년전용창업자금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자금 지원(융자)	140,000	150,000	-
창업성공 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하여 제조업 위주의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창업 숙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과창출형 기업 육성	초기 창업기업	자금 지원(보조) 교육 지원 경영 지원 인프라 지원	50,000	102,230	92,222
소상공인 창업지원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국내·외 창업교육, 신사업 아이템 제공, 상권정보 제공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여 창업성공률 제고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보조) 교육 지원 인프라 지원	-	3,188	1,907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조합(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에 기금을 출자 국내 벤처캐피탈 산업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조성하여 민간 주도의 벤처 투자시장 정착을 촉진	중소기업	자금 지원(출자)	830,000	450,000	240,000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예산 및 기금 사업설명자료)

한편 2019년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예산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전체의 8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sup>12)</sup> 본 논문에서는 2019년 예산 기준 창업기업 대상 주요 사업의 예산을 중소벤처기업부의 것에 한정해 살펴보았다(〈표 2〉 참조). 주요 창업기업 지원 사업으로는 장애인기업 육성, 민관협력 창업자 육성, 창업저변확대, 창업사업화 지원, 투융자복합금융(융자), 창업기업자금(융자), 창업성공패키지, 소상공인창업지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등을 들 수 있다. 해당 사업들은 사업자의 연령대에 따른 구분,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른 구분, 벤처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른 구분 등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여 맞춤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리고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것들은 관련 주무기관 지원을 비롯해 기업에 직접 제공하는 현물지원, 교육지원, 자금지원 등 다양하다. 특히 자금지원은 본 연구의 관심사인 정책자금 지원에 해당되는데, 보조금뿐만 아니라 투·융자, 출자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금 지원을 의미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정책자금 투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미루어보아 정부의 창업기업 대상 지원과 정책적 고려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투입되고 있는 정책자금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그동안 다소 부족하였다. 특히 소규모 신생기업들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정책자금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 창업가의 사업확장의도를 상정하여 정부의 정책자금이 사업확장의도를 제고하는 데 보탬이 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IV. 연구 설계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지원자금이 소규모 기업을 경영하는 창업가의 사업확장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설문인 ‘2016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1인 창조기업의 실태를 조사할 때 1인 창조기업 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은 기업만을 모집단으로 하지 않고,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상시근로자가 없

12) 벤처스퀘어. 2019.1.3., ‘올해 정부 창업지원사업 “1조 1,180억원 규모”’. <https://www.venturesquare.net/772787>. 접속일: 2019.4.20.

는 소규모 사업체 전체를 모집단으로 표본을 추출한다<sup>13)</sup>. 즉 자료는 1인 창조기업실태조사로 명명되었으나 사실상 소규모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1인 창조기업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모집단은 1인 창조기업이 아닌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대상인 소규모 기업에 대한 연구를 가능케 한다. 본 연구는 자료의 표본 중 중 비교적 사업 확장 가능성이 높은 업력이 5년 이내의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결측값을 제거하였다. 또한 업종을 변경하려고 계획하거나 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대표자의 응답도 본 연구의 방향과 맞지 않아서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767개 기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 2. 변수 정의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한 1인 창조기업실태조사의 코드북을 활용하여 각 변수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설문을 응답한 대표자의 사업확장의도 여부이다. “귀사의 향후 1년 이내의 사업운영계획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현행 유지라고 응답한 경우 0을 사업규모 확장이라고 응답한 경우 1의 값을 부여하였다. 종속변수가 이항형 변수이므로 이에 적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창업 당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포함한 창업자금이다. 설문 문항은 “귀하는 창업 당시 창업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였습니까?”이며 창업가가 창업에 들어간 총 자금(백만원)과 자기자금, 친인척, 공동창업자, 민간금융용자, 정책자금(보조금 포함), 기타 등 자금출처의 비율(%)을 기입하게 되어있다. 이 자금출처 비율 문항의 응답값을 총 자금 응답값과 곱하여 금액으로 환산하여 창업 당시 정부로부터 받은 창업자금의 총액을 추정하였다. 정책자금은 1인 창조기업에 국한된 정부지원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창업 당시 지원받은 다양한 정부 지원’의 총액을 의미한다. 결과 해석 시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3)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담배제조업(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1차 금속 제조업(24)을 제외한 그 외 제조업에 속한 기업이 모집단으로 선택된다. 따라서 사실상 거의 모든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기업을 모집단으로 보고 있다.

〈표 3〉 변수 정의

변수		정의	
종속변수			
사업확장도의도(exp)		현상유지 (=0), 사업규모확장 (=1)	
독립변수			
창업정책자금수혜액(public_fund, public_fund^2)		정부로부터 창업 당시 지원받은 정책자금(보조금 포함)(원) (자연로그)	
통제변수			
기업 특성	매출액(ln_sale)	2015년 12월 말 기준 재무 현황 중 매출액(원) (자연로그)	
	기업형태(firm_type)	법인사업체 (=1), 개인사업체 (=0)	
	업력(year)	2016년-창업연도	
	종사자수(ln_emp)	2015년 12월 말 기준 총 종사자수(log)	
	기업 산업 특성 (sector) <Reference: 저기술산업>	고기술산업(high), 중고기술산업(mhigh), 중저기술산업(mlow), 저기술산업(low)	
		고기술	석유정제업, 화학, 의약품제약업, 전자부 품컴퓨터, 의료정밀광학기기, 전기장비제 조업
		중고기술	고무제품, 플라스틱제조업, 기계장비, 자 동차제조업
		중저기술	비금속 제조업, 금속 제조업
저기술		음식료품, 섬유, 목재, 가구제조업	
창업가 특성	성별(gender)	남성 (=0), 여성 (=1)	
	과거창업횟수(exp_number)	과거 창업한 횟수	
	창업준비기간(pre_period)	창업결심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소요시간(월)	
지리적 특성	권역(location1) <Reference: 서울>	서울(location1), 인천/경기(location2), 충청(location3), 호남(location4), 영남(location5), 강원/제주(location6)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크게 기업의 특성과 창업가의 특성, 지리적 특성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먼저 기업의 특성과 관련된 통제변수는 매출액, 기업형태, 업력, 종사자 수 및 기업의 산업특성을 포함하였다. 첫째, 기업의 매출액을 통제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매출액 증가는 창업가의 사업확장도의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더 많은 매출과 추가적인 수익과 같은 경제적 유인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인 창조기업실태조사 내 2015년 12월 말 기준 재무현황에서 매출액을 자연로그로 취해 변환한 뒤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둘째, 기업이 법인 사업체인지 혹은 개인사업체인지 여부를 통제하였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개인이 사업의 주체로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윤 및 부채 모두 개인으로 귀속된다. 반면 법인사업체

는 주주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형태로 모든 이윤은 법인 소속이며 기업의 대표 는 급여를 받고 주주들은 이익에 따른 배당을 받는다. 따라서 개인사업체 대표자의 경 우에는 사업을 확장할 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 및 부채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확장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반면 법인사업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주주들로부터 추가적인 출자가 가능하다. 또한 사업을 실패할지라도 법적인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상대적으로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덜하기 때문에 보다 공격적인 사업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사업 확장 의도와 긍정적인 관계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이 법인사업체일 경우 1의 값을 개인사업체일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여 통제하였다. 셋째, 기업의 업력과 종사자수를 통제하였다. 창업가는 초기에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기업의 업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을 확장하기 보다는 안정화시켜 성숙단계에 진입하려는 경향을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업력의 증가와 창업가의 사업확장 의도는 부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업력은 설문을 실시한 2016년을 기준으로 하여 설립연도와 차를 구하였고, 종사자수는 2015년 12월 말 기준의 남녀 근로자 수를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산업특성을 통제하였다. 같은 제조업이라도 추구하는 기술수준에 따라서 창업가가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고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경우 빠른 기술변화 속도에 맞추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다른 산업분야에 있는 창업가보다 빠른 사업 확장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Schmiedeberg, 2008; 이경남, 장효정 & 최상옥, 2016)에서 사용한 산업 분류를 참고하여 고기술, 중고기술, 중저기술, 저기술산업으로 기업의 특성을 나누어 산업별 차이를 고려하였다. 준거집단은 저기술산업이다.

앞서 논의한대로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이 경영행태 및 사업의 성공 등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Watson et al., 1998; Wiklund & Shepherd, 2003)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창업가의 성별과 과거창업횟수 그리고 창업준비기간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첫째, 성별 차이에 따른 비교우위 또는 비교열위가 기업 초기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 논의들(EU, 2008; UNCTAD, 2010; 김영옥·임희정, 2006; 박종복, 2018)을 차용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Brush (1992)의 연구에서는 여성 창업가의 경우 사업의 확장과 같은 경제적 목표에 비교적 덜 민감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는 여성이 가지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차별과 장벽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과거의 창업횟수와 창업준비기간은 경영자의 지식과 경험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대리 지표로써 분석 모형에 포함시켰다. 창업의 경험이 많은 창업가는 위기의 대처능력이나 사업의 운영 면에 있어서 경험



이 적은 창업가에 비해 일반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교육이나 창업 경험 등을 가진 창업가는 사업을 더 확장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Aidis & Mickiewicz, 2006). 창업 준비기간이 긴 창업가의 경우 비교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짧은 창업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초기에 사업을 정착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향후 사업을 지속하고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업이 속한 지리적 위치를 통제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 인천 및 경기, 충청, 호남, 영남, 강원 및 제주 등 총 6개 권역으로 구분하였고, 서울을 준거 집단으로 하고 나머지 권역을 더미변수로 하여 분석모형에 추가하였다. 거시적 변수들, 예를 들어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과 같은 거시경제지표들은 한 국가라는 경계 내 모든 기업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외생적 변수이기 때문에 통제 의미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기업이 위치한 지역마다 다른 경제적 환경요인은 창업가의 사업확장 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하는 데 사회간접자본, 산업 집적 여부, 지식 공유 등 지리적 요인들이 중요하다는 점은 일찍이 논의되어왔다(Marshall, 1890; Arrow, 1962, Romer, 1986; Jacob, 1969). 본 연구는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하면 산업의 집적수준이 다르다는 오래된 논의(문미성, 2001)와 기업의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수도권 여부에 따라 상이하다는 논의(정준호 외, 2009) 및 수도권 내에서도 권역에 따라 기업의 생애주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논의(안영수·이승일, 2015) 등 각종 국내 논의를 감안할 때 권역별 구분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V. 분석 결과

〈표 4〉는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기업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창업가의 사업확장 의도 여부에 따라 기업의 특성을 구분하였으며, 기업형태, 산업특성 및 성별의 경우에는 사업확장 의도 여부에 따른 해당 비율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부 창업자금의 경우 사업규모를 확장할 의도를 가진 기업이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상유지 의도를 가진 창업가가 속해 있는 기업의 경우 약 1천만원을 정부로부터 창업자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데 반하여, 향후 인력이나 설비 등 사업확장 의도를 가진 창업가가 속해 있는 기업의 경우 약 1천 7백만

원을 지원받아 약 1.6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정부로부터 창업자금을 많이 받는 기업의 창업자가 사업규모확장 의도가 더 높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 등을 고려해야 하고, 정부의 창업자금과 사업확장의도 여부와 비선형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매출액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두 상이한 기업군 간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반면 업력과 종사자수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분석대상 기업의 특성

		사업확장 의도 여부		
		현상유지	사업규모확장	
창업정책자금수혜액(백만원)		10.28	16.91	
기업 특성	매출액(백만원)	85.07	175.40	
	기업 형태	법인사업체(158개)	94(59.49%)	64(40.51%)
		개인사업체(609개)	496(81.44%)	113(18.56%)
	업력(2016-창업연도)		3.19	2.99
	종사자수(명)		2.11	3.02
	산업 특성	고기술(209개)	145(69.38%)	64(30.62%)
		중고기술(157개)	109(69.43%)	48(30.57%)
중저기술(75개)		63(84.00%)	12(16.00%)	
저기술(326개)		273(83.74%)	53(16.26%)	
창업 가특 성	성별	남성(619개)	458(73.99%)	161(26.01%)
		여성(149개)	132(89.19%)	16(10.81%)
	과거창업횟수(회)		0.42	0.47
	창업준비기간(월)		8.95	13.10
기업 수		590개	177개	
합계		767개		

주) 정부창업자금과 매출액, 종사자수는 로그변환하지 않고 본래 값을 표기함

흥미로운 기업의 특성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의 형태와 사업확장의도 여부이다. 총 158개 기업이 법인사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 94개 기업인 약 60%가 현상유지를, 64개 기업인 약 40%가 사업규모를 확장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하여 총 609개 개인사업체 중 496개 기업인 약 81%가 현상유지를, 113개 기업인 19%가 사업규모를 확장하겠다고 응답하여 기업형태 간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산업의 특성과 사업확장 의도 여부를 단순 분석해 볼 때 석유, 화학, 의약품 등 고기술을 다루는 기

업과 기계장비, 자동차 제조업 등 중고기술을 다루는 기업의 창업가가 중저기술이나 저기술 관련 기업의 창업가보다도 사업확장할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창업가 개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사업확장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성향의 차이인지 아니면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야기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비율에 근거해 해석하기 보다는 여성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창업횟수의 경우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창업준비기간의 경우에는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현상유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창업가의 경우 약 9개월을 준비하였지만, 사업확장 의도를 가지고 있는 창업가의 경우 이보다 약 1.4배 높은 13개월을 창업준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는 창업가의 사업확장 의도에 대한 정부창업자금지원의 효과성을 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지리적 요인이 기업 차원이 아닌 상위 차원(level)임을 고려한다면 다층 혼합효과 로지스틱 모형(multilevel mixed-effects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지만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 결과에 따르면 p-value가 0.4026으로 일반적인 로지스틱 모형이 더 나은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집단 내 상관계수(Inter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의 값도 0.003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모형의 적합도(Goodness of fit)를 보기 위하여 Hosmer-Lemeshow 검정(Hosmer, Lemeshow, & Sturdivant, 2013)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p-value가 0.2755로 유의수준인 0.05보다 커 추정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창업자금이 창업가의 사업확장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가정한다면 사업확장 의도와 정부창업자금과의 관계가 선형관계가 아닌 역U자 곡선(Inverted U-shaped curve) 형태의 비선형관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정부의 창업자금을 받은 창업가는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지속하고 확장하려는 행태를 보이지만 일정 이상의 자금지원은 창업가로 하여금 사업확장보다는 창업 당시에 지원받은 자금으로 현상유지를 하려는 경향의 행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정부 자금지원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서 나타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처럼 정부 창업자금의 지원 역시 무한정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보다는 오히려 소규모 기업 창업가의 사업확장 의도를 저해하고 현실에 안주하게끔 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해석에 있어서 보다 신중해야 하겠지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지 않으려는 피터팬 증후군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확장하지 않고 정부의 자금만을 편취하여 현상유지하려고 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표 5〉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Coef.	Odds Ratio	Robust s.e.	
독립 변수	창업정책자금 수혜액	ln_public_fund	0.555**	1.742	0.263
		ln_public_fund2	-0.029**	0.971	0.015
기업 특성	매출액	ln_sale	0.069**	1.071	0.029
	기업형태	firm_type	0.657***	1.930	0.229
	업력	year	-0.203**	0.816	0.095
	종사자수	ln_emp	0.354**	1.425	0.145
	산업특성 (sector) <Reference: 저기술산업>	sector_1	0.596**	1.815	0.239
		sector_2	0.669***	1.952	0.249
sector_3		0.103	1.108	0.350	
창업가 특성	성별	gender	-1.012***	0.363	0.309
	과거창업횟수	exp_number	0.018	1.019	0.090
	창업준비기간	pre_period	0.029***	1.029	0.008
지리적 특성	권역 (location) <Reference: 서울>	location2	-0.717*	0.488	0.379
		location3	-0.733*	0.480	0.385
		location4	-0.858**	0.424	0.413
		location5	-0.963***	0.381	0.372
		location6	-0.343	0.709	0.454
상수		-2.049***	0.129	0.657	
관측치			767		
Pseudo R-squared			0.1279		
Log pseudolikelihood			-361.34954		
Wald chi-squared			81.38		

\*p<.1, \*\*p<.05, \*\*\*p<.01

주)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함

기업의 특성과 관련된 통제변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의 특성 중 매출액은 창업가의 사업확장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창업가가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것은 쉽게 예상 가능하다. 또한 개인사업체에 비해서 법인사업체에 있는 창업가가 사업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이익과

손해를 포함한 모든 위험을 개인이 떠안고 가기 때문에 사업 확장에 소극적인 반면에 법인사업체의 경우 사업에 대한 위험이 투자자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법인사업체보다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개인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기업의 업력이 증가할수록 창업가의 사업확장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업력이 쌓일수록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려는 창업가의 특성이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는 창업 초창기에 이미 사업을 확장하였기 때문에 더 확장할 의도가 없는 것일 수 있다.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창업가의 사업확장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성장하려는 기업의 경향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산업특성에 따라서 창업가의 사업확장 의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저기술 산업에 속한 소규모 기업에 비해 고기술과 중고기술에 속한 소규모 기업의 창업가가 사업확장 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성과 전문성이 높은 고기술과 중고기술에 속한 기업의 경우 다른 소규모 기업과 달리 고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해당 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 스케일업(scale-up)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창업가의 특성과 관련된 통제변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가 특성은 성별과 창업준비기간이 사업확장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성별에 따른 변이를 분석한 결과 대표자의 성별이 남성일 때 대비 여성일 때 사업확장 의도가 낮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OECD의 논의와 무관하지 않다. OECD의 2012년-2016년 조사 결과 두려움(fear of failure)은 창업의 장벽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높았다. 특히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52.2%의 여성들이 두려움을 창업의 장벽으로 꼽았다. 이는 OECD 전체 국가의 평균 비율 43.7%보다 높은 것이다(OECD, 2017). 사업을 하는 동안 은행의 대출이나 투자자로부터의 자금획득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Marom, Robb, & Sade, 2016). 또는 여성이 대표자인 기업이 진입장벽이 낮은 저기술, 소자본 위주의 산업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의 분포를 살펴보면 저기술분야에서 여성 및 남성 창업가의 비율은 여성 및 남성 창업가 전체 중 각각 64.2%와 37.3%로 나타나 저기술 제조업의 여성 창업가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해석에 주의를 기해야 하며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창업준비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 사업확장 의도를 가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창업가의 기회비용 및 매몰비용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과거창업횟수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과거 창업이 동종업계에서 이루어졌는지, 과거 창업 시 어느 정도 사업을 지속하였으며 확장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리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도 흥미로웠다. 강원 및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 속한 기업의 경우 서울에 위치한 기업에 비해 사업확장의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간에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으로 차별적 정책을 시행하는 것보다 이를 더 세분화하여 지역별 지원의 차별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 VI.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최근 정부는 중견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현상, 즉 피터팬 증후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들이 건의한 규제나 제도를 일부 개선하기로 하였다.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고용위기지역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거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 특히 담보대출 등 특허기술 가치평가비용 지원 관련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sup>14)</sup> 또한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정부가 피터팬 증후군을 해결하려는 정책적 기제를 마련하고 있다.<sup>15)</sup>

하지만 이러한 피터팬 증후군은 비단 중견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특히 창업을 시작하는 소규모 기업 역시 초기의 열정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현실에 타협하여 어느 정도 선에서 사업을 현상유지하려는, 더 나아가 현상유지하면서 정부지원을 계속 수혜하며 연명하려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창업가의 사업확장에 대한 내적 갈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초반에는 정부의 창업자금이 창업가의 사업확장의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나 어느 정도 자금의 크기가 확보된 이후에는 오히려 사업확장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창업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려는 열망을 갖는 데에는 비단 창업가의 개인적 요인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창업자금 역시 영향을 줄

14) 이투데이, 2018.7.10., “정부, 중견기업→중소기업 회귀 ‘피터팬 증후군’ 막는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no=1639752>. 접속일: 2019년 3월 13일.

15) 한국경제, 2018.6.19., “마크롱, 中 中 ‘피터팬 증후군’ 고친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61919291>. 접속일: 2019년 3월 13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적인 관점에서 창업가에 대한 정부의 창업자금 지원이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정부는 단순히 창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목표 아래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없이 일정 기준만을 충족하면 창업자금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창업의 수라는 양적 지표 성장은 달성했는지 모르나 옥석의 구분 없이 지속된 지원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정부지원 의존형 기업들을 양성해 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게 볼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큰 틀 아래 과거 자리 잡았던 각종 지원정책이 면밀한 성과분석 없이 행위 자체의 정당성 및 정치적 당위성에 의거하여(최종민, 2018)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을 수 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정부지원을 결정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옥석을 가리기 쉽지 않고, 지원 대상을 일부 기업으로 한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비용과 업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당장의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뿌려주기식을 선호한 것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수가 폐업하더라도 그 안에서 소위 고성장 기업의 출현을 기대하며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분명 창업 초기에는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겪기에 이에 대한 정책자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역시 필요하다. 실제로 창업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자금 조달이기에 정부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지양해야 할 '나쁜' 것은 아니다. 단, 지나친 창업자금 지원은 창업 초기에 빠르게 성장하려는 창업가의 의지를 떨어뜨리고 지속적으로 자금편취만을 목적으로 연명하는 일종의 좀비기업으로 전락하게 만들 수도 있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창업 초기 무분별한 자금지원보다는 일정 수준의 자금지원을 하고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추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창업교육 등의 간접지원형태를 추구해야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둘째, 정부는 자금, 인력 등의 창업지원에 대한 접근을 기업이 추구하는 기술 분야 등 기업의 특성이나 창업가의 특성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하여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법인사업체에 비해 개인사업체의 경우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을 모두 개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 있는 개인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규모확장에 대한 의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법인사업체와 개인사업체를 분리하여 지원하는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준비기간이 길어질수록 창업 후에 대한 대비를 잘하기 때문에 사업을 보다 잘 운영할 수 있고 따라서 사업에 대한 확장에 대한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기간뿐만 아니라 얼마나 잘 준비하는지에 대한 질 역시 중요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봤을 때

지속적인 사업확장에 대한 욕구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준비가 덜 된 창업은 실패로 인한 트라우마 등의 부작용이 더 크기에 애초에 자금지원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고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의 육성을 가려 집중지원을 해주어 강소기업을 키우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기술혁신을 위한 중소기업혁신연구(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은 각 단계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적격자에게만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별 지원 강화는 정부의 정책자금의 남용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자금을 집행하도록 도울 수 있다.

끝으로, 창업지원에 대한 적실성 있는 평가체계 구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정부의 창업자금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자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업이 피터팬 증후군을 덜 경험하고 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의 효과를 내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자금이 지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본 논의에서 언급한 사업확장의도를 저해하지 않는 ‘적절한’ 정부 창업지원 금액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향후 정량적·정성적 검토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에 필요한 요소가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도 선행되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 각 단계별로 자금지원을 시행한다고 하였을 때 어떤 평가자가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기업 또는 창업가의 초기 사업 아이템을 평가하고 적격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평가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자금의 지원 후에도 소규모 창업기업의 성과를 추적 평가할 수 있는 체계 역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Aidis, R., & Mickiewicz, T. 2006. "Entrepreneurs, expectations and business expansion: Lessons from Lithuania". *Europe-Asia Studies*, 58(6): 855-880.
- Arentz, J., Sautet, F., & Storr, V. 2013. Prior-knowledge and opportunity identification. *Small Business Economics*, 41(2): 461-478.
- Arrow, Kenneth J. 1962.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learning by doing".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29(3): 155-173.
- Autio, E., & Acs, Z. 2007. "Individual and country-level determinants of growth aspiration in new venture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27(19): 2.
- Ajzen, I. 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 Action control* (pp. 11-39): Springer.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Brush, C. 1992. "Research on women business owners: past trends, a new perspective and future dire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4): 5-30.
- Burmeister, K., & Schade, C. 2007. "Are entrepreneurs' decisions more biased?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susceptibility to status quo bia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2(3): 340-362.
- Busom, I. 2000.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R&D subsidies. *Economics of innovation and new technology*, 9(2): 111-148.
- Butler, I., Galassi, G., & Ruffo, H. 2016. "Public funding for startups in Argentina: an impact evaluation". *Small Business Economics*, 46(2): 295-309.
- Dilling-Hansen, M. 2017. SMEs: Peter Pan syndrome or firms not grown up? Creativity, business skills and economic growth of Danish entrepreneurial firms. *Athens Journal of Business & Economics*, 3(1): 7-20.
- Duguet, E. 2004. Are R&D subsidies a substitute or a complement to privately funded R&D? an econometric analysis at the firm level. *Revue d'économie politique*, 245-274.
- Estrin, S., Korosteleva, J., & Mickiewicz, T. 2013. Which institutions encourage entrepreneurial growth aspira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8(4): 564-580.
- EU. 2008. *Evaluation on policy: Promotion of Women Innovators and Entrepreneurship*, Final Report. 25 July 2008.
- Figlioli, A., Rush, H., & Sapsed, J. 2017. Mind the Gap: New types of innovation habitats to help startups grow and scale faster: The Digital Catapult Centres in UK.
- Gaglio, C. M., & Katz, J. A. 2001. The psychological basis of opportunity identification: Entrepreneurial alertness. *Small business economics*, 16(2): 95-111.
- Gray, C. 2002. "Entrepreneurship, resistance to change and growth in small firms".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9(1): 61-72.
- González, X., & Pazó, C. 2008. Do public subsidies stimulate private R&D spending?. *Research Policy*, 37(3): 371-389.

- Hosmer Jr, D. W., Lemeshow, S., & Sturdivant, R. X. 2013. *Applied logistic regression* (Vol. 398). John Wiley & Sons.
- Jacobs, J. 1969. *The economy of cities*. New York: Random House.
- Kane, T. J. 2010. *The importance of startups in job creation and job destruction*. Kauffman Foundation Research Series: Firm Formation and Economic Growth.
- Kirzner, I. M. 1979. Perception, opportunity, and profit: University.
- Kirzner, I. M. 1997. Entrepreneurial discovery and the competitive market process: An Austrian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5(1): 60-85.
- Lerner, Josh. 1999. "The Government as Venture Capitalist: The Long-Run Impact of the SBIR Program", *Journal of Business*, 72(3): 285-318.
- Marom, D., Robb, A., & Sade, O. 2016. Gender dynamics in crowdfunding (Kickstarter): Evidence on entrepreneurs, investors, deals and taste-based discrimination. *Investors, Deals and Taste-Based Discrimination*.
- Marshall, A. 1890. *Principles of economics* (Vol. 1). London: Macmillan And Co. And New York.
- Miller, D. 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Liao, J., Welsch, H., & Stoica, M. 2003. Organizational Absorptive Capacity and Responsivenes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Growth-Oriented SM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8(1): 63-86.
- OECD. 2017. *Women's self-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activities, The Missing Entrepreneurs 2017*. OECD Publications.
- Reynolds, P. D. 2007. "New firm creation in the United States a PSED I overview". *Foundations Trends® in Entrepreneurship*, 3(1): 1-150.
- Reynolds, P. D., & Curtin, R. T. (2009). New firm creation in the US: Initial explorations with the PSED II data set.
- Romer, Paul M. 1986.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5): 1002-1037.
- Sandri, S., Schade, C., Musshoff, O., & Odening, M. 2010. "Holding on for too long? An experimental study on inertia in entrepreneurs' and non-entrepreneurs' disinvestment choice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76(1), 30-44.

- Schmiedeberg, C. 2008. Complementarities of innovation activitie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German manufacturing sector. *Research Policy*, 37(9): 1492-1503.
- Stiglitz, J. E., & Weiss, A. 1981. Credit rationing in marke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1(3): 393-410.
- UNCTAD. 2010. *Innovation and Women's Entrepreneurship: An Exploration of Current Knowledge*, Final Draft. May 2010.
- Watson, K., Hogarth-Scott, S., & Wilson, N. 1998. "Small business start-ups: success factors and support im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4(3): 217-238.
- Wessner, C. 2006. "Government Programs to Encourage Innovation by Startups & SMEs: The Role of Innovation Awards". Tokyo, Japan, 10.
- Wiklund, J., & Shepherd, D. 2003. "Aspiring for, and achieving growth: The moderating role of resources and opportunities".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40(8): 1919-1941.
- 김영옥·임희정. 2006. "여성기업의 장애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 107-140.
- 김준기·이영범·이석원·장경호·이민호. 2008.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사업의 효과성 평가: 정책 자금 지원 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6(1): 1-32.
- 김창봉·이승현. 2017. "창업지원제도가 1인창업자의 행동특성에 따라 창업기업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2(2): 41-54.
- 김태형. 2016.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중소기업의 현황 및 정책적 대응방안》. 부경대학교 대학원, 부산.
- 김학수. 2007.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문미성. 2001. "수도권 산업집적이 기업의 혁신수행력에 미친 영향." 《국토계획》, 36(3): 193-212.
- 박은희. 2015. 《정부재정의존형 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복. 2018. "여성 기술창업 기업의 환경 및 경영자 특성이 초기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혁신학회지》, 13(1): 235-258.
- 박찬수·김승현·장우영. 2015. 《중견기업의 성장경로 분석과 맞춤형 지원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15-13.

- 송종국·김혁준. 2009. "R&D 투자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기술혁신 연구》, 17(1): 1-48.
- 안선민·이수영. 2017. "공공기관 정부지원금과 도덕적 해이에 관한 연구-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업무추진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6(4): 133-163.
- 안수진. 2006. "소상공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한국창업학회지》, 1(1), 214-231.
- 안영수·이승일. 2015. "수도권 시군구별 입지요인이 제조업 기업의 생애주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역연구》, 31(3): 55-77.
- 이경진·박남준. 2018.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의향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안전학회지》, 8(1): 13-27.
- 이경남·장효정·최상욱. 2016. "기술혁신 저해요인의 결정 요인과 상호보완성."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4): 109-130.
- 이병기. 2015. 《우리나라 기업의 역동성 저하 점검. KERI Brief》. 한국경제연구원.
- 이영범. 2006.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혜 기업의 상대적 효율성과 생산성 추이 분석." 《행정논총》, 44(4): 199-229.
- 이윤숙·이상준·신호정. 2018. "기업가의 창업동기와 고용창출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영학연구》, 47(4): 783-805.
- 장현주. 2016. "중소기업 R&D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4): 195-218.
- 정준호·장순희·김갑열·김성희. 2009.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혁신활동의 결정요인 분석." 《도시행정학보》, 22(1): 3-22.
- 중소벤처기업부. 2018. 《중기부,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 최대승. 2014. 《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지원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보고 2014-030.
- 최종민. 2018. "정부 R&D 지원이 중소기업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 기업 특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6(2): 213-248.

〈별첨 1〉 중소기업 정책자금용자 지원 방향 및 사업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지원방향	- 창업 및 시장진입 - 성장단계 디딤돌	- 성장단계진입 및 지속성장	- 재무구조개선 - 정상화/퇴출/재창업
지원사업	* 창업기업 - 혁신창업지원 - 일자리창출촉진 - 개발기술사업화 * 투융자복합금융 - 이익공유형	* 신성장기반 - 혁신성장유망 - 제조현장스마트화 * 투융자복합금융 - 성장공유형 - 스케일업금융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수출기업의 글로벌기업화	* 재도약지원 - 사업전환(무역조정) - 재창업 - 구조개선전용
	* 긴급경영안정자금 - 일시적애로및재해/일반경영안정지원		

(출처: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Is Government Support for Nascent Entrepreneurs Always Good for Their Motivation to Expand the Business?

Iljoo Park & Jongmin Choi

Recently,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for new entrants has been growing in accordance with government policies. The aim is to help nascent entrepreneurs to start successful businesses through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and ultimately promote job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in the long run. In some cases, however, firms strive to acquire only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without considering the original purpose of financial support and some of them keep their businesses solely with financial suppor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for startups on the intention of nascent entrepreneurs to expand their business. Based on 767 firms within five years of starting a business, the result showed that to some extent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nascent entrepreneurs' intention to expand their business, however, too much support has a negative effect. This study has an academic significance because it presents a new perspective on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for new entrants.

※ Keywords: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 Government support, Financial support, New entrant